

신자유주의 연구*

徐 廷 勳
역사문화학과

I. 머리말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 되어있다. 전문적인 학자나 매스컴 관계자 등이 아닌 일반국민도 1997년 ‘IMF 사태’를 통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의 의미를 어쩔 수 없이 경험하거나 알게되도록 강제되면서 신자유주의를 그런 맥락에 있는 어떤 음산한 용어로 부지불식간에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신자유주의는 당연히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과 출판에서도 주목을 받는 주제가 되었다. 교보문고나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검색어를 쳐보면 그것에 관련된 2-30권의 전문적인 서적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언론에서도 발견된다.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기사들이 자주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성공적인 IMF 환란 졸업선언’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라는 주제가 여전히 우리들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정작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가 엄밀한 학문적 토론의 산물로 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자에 따라서 그것은 ‘시장중심적 사회를 지향하는 현실적 운동 내지 정치 이데올로

* 이 연구에 2001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비가 지원되었음.

기로’ 또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입각하여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기제를 확산시키려는 정책틀 또는 정책 매뉴,’ 또는 ‘시장주의적 경제이데올로기’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¹⁾. 여기서는 김세균 교수의 말을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의미를 종합해보려 한다.

현 시기에 문제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제반 문제점과 병폐를 분배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의해 교정하려는 ‘혁신 자유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되는 이 ‘신자유주의’는 원래는 1970년대 중반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든 이후 그 구조적 불황의 부담을 자국 및 제3세계의 노동자-민중 전체에게 폭넓게 전가시켜 해결하려고 한 선진국 독점자본의 반동적인 공세로서 출현하였다²⁾.

김 교수의 견해는, 신자유주의를 노골적으로 반동적으로 보는 다소 급진적 편향성을捨象한다면, 그것의 핵심교의가 시장중심주의라는 사회과학계의 일반적 인식을 효율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즉 학계와 언론계 내지 일반인이 사용하는 신자유주의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지라도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되어왔다³⁾.

-
- 1) 김균, 「하이테크와 신자유주의」, p. 86,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p. 235, 손호철,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p. 378, 세 논문은 모두 안병영, 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1999)에 실려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세계 각 지역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적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안 등을 연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신자유주의 자체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일반론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여기서 제시하는 논문이나 저서의 제목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2)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김성구, 김세균 등 지음, 문화과학사, 1998), pp. 61-2.
 - 3) ‘인터넷 한겨레’의 ‘DBDIC’(묻고 답하는 지식거래소)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반인들의 질문과 그들 나름대로의 답변들이 들어있는데 한 네티즌의 말이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단편적으로 말해서 (어떤 사회적인 의미보단 경제적인 의미에

그러나 ‘이런 종류의 신자유주의’와 본질이 전혀 다른 종류의 신자유주의도 있다. 김세균 교수의 글보다 4년 전인 1994년에 출판된 한 저서에서 송규범 교수도 ‘신자유주의’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자유주의는 빅토리아 말기 영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었다. 20세기 초두에 이르게 되면 진보적 자유주의자들 가운데는 정부가 이전에는 사적 자선에 맡겨졌던 이른바 ‘사회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국가 간섭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은 이전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변화였다. 그런데 이 변화는 사회주의를 취하기 위해 자유주의를 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나 시장경제 대한 전통적인 자유주의 개념의 확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항상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초석이었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⁴⁾.

얼핏 보더라도 두 인용문에서 등장하는 신자유주의들은 각기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송 교수의 신자유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의 한 이데올로기를 지칭하고 있는데 비해 앞서 김 교수의 신자유주의는 현재의 한국과 전 세계의 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의미하고 있다. 물론 사회과학계와 언론계 등에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미의 신자유주의는 후자이며, 영국사의 해당시기를 연구하는 몇몇 서양사학자들만이 전자의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현

서)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이래 자본주의가 발전해오다가 경제공황이후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많은 간섭을 하게 되었죠 이걸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섞인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 오는 게 정말 좋은 건 줄 알았지만 오늘날 북유럽이나 서유럽 등지 혹은 미국 등에서 그런 정부의 간섭들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다시금 자유가 강조되는 쪽으로의 변화(예를 들면 민영화)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하지 않나 싶네요.” “기타담변, 정확히는 모르지만”이라는 제목으로 riarben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2000년 10월 15일 <http://find.dbdic.com/dbdic>.에 실은 글이다. 문법에 어긋난 부분도 원문 그대로 실었다.

4) 송규범, 『신자유주의』, 『서양의 지적 운동』, (김영환, 임지현 편, 지식산업사, 1994), pp. 288.

대의 신자유주의'와 '과거의 신자유주의', 달리 말해 '사회과학계의 신자유주의'와 '서양사학계의 신자유주의'는 현재 사용되는 빈도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계의 신자유주의가 워낙 일방적으로 사용되고 서양사학계의 그것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이중의 의미보유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신자유주의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각각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다른 교의들 가운데 어떤 것이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에 적합한가를 가리고 나머지에게 대해 적절한 새 이름을 지어주어야 한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절대적 다수라는 점만으로 사회과학계의 신자유주의가 그 이름의 선택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두 신자유주의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단순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송 교수의 신자유주의가, 다소 거칠게 추론해 압축한다면, '자유방임으로 발생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의 간섭을 요구하는 것'을 그 핵심 교의로 한다면, 김 교수의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방임, 즉 시장 활동에 맡길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자유방임으로부터 국가간섭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교의와 이와 반대로 '국가간섭으로부터 자유방임으로 전환'을 주장하는 교의 모두가 놀랍게도 '신자유주의'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논문은 정 반대되는 두 교의가 어떻게 모두 신자유주의로 불리게 되었는가를 따져보고 이러한 명칭의 중복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혼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혼란의 현실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복된 명칭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혼란을 피하고 보다 적절하고 유의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 끝에 결국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송규범 교수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김세균 교수의 신자유주의가 각기 인과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올바른 명칭과 인과연쇄는 고전적 자

유주의 - 신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로의 복귀가 될 것이다.

II. New Liberalism : ‘자유방임에서 간섭국가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서로 정반대인 두 교의들을 지칭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 번역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앞서 김세균 교수의 신자유주의는 영어인 ‘Neo-Liberalism’을 번역한 것이고 송규범 교수의 그것은 ‘New Liberalism’을 번역한 것이다. 단순하게 봤을 때, Neo와 New 두 단어 모두 ‘새로운’ 또는 ‘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양자 모두를 ‘신자유주의’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이랄 수 없다. 그러나 Neo-Liberalism과 New Liberalism⁵⁾이란 두 영어는 영미권에서 당연히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렇게 구분되어 사용되어왔다. 그래서 두 영어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모두 ‘신자유주의’로 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영어를 다른 용어로 번역할 경우 문제는 간단하게 해소될 것인가? 예컨대 Neo-Liberalism을 ‘새로운 자유주의’로, 그리고 New Liberalism을 ‘신자유주의’로 번역한다면 영어의 경우처럼 구분될 수는 있다. 그러나 ‘새로운’이나 ‘신’이 서로 문자는 다르지만 실상 동일한 내용의 형용사들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나 새로운 자유주의 모두가 서로에 대해 논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결국 의미상으로 ‘새롭다는’ 신자유주의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Neo-Liberalism과 New Liberalism으로 구분되는 영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영미의 관련 연구자들 역시 의미가 동일한 두 형용사를 사용하여 양자를 구분했을 뿐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5) 과거의 신자유주의와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간편하게 구분하기 위해 New Liberalism과 Neo-Liberalism이란 영어를 직접 사용할 것이다. 물론 최종적인 작업에서 그것들은 신자유주의와 다른 명칭의 자유주의로 구분될 것이다.

대해 고찰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Neo-Liberalism이나 New Liberalism이 도대체 무엇에 비해 새로운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자유주의에서 바로 그 ‘새로운’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시기상으로 앞선 서양사학계의 New Liberalism을 살펴보자⁶⁾. New Liberalism은 그에 앞선 19세기 중엽의 자유주의, 정확히 말해 영국의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에 비해 ‘새로워진’ 자유주의임을 의미한다. 그 ‘새로워짐’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분석은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은 자유방임, 즉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부정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1776년에 출간된 『국부론』에서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을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의 부는 저절로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⁷⁾. 이를 수용한 고전 경제학자들은 자유

- 6) 서병훈 교수는 Neo-Liberalism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는 사회과학 연구자들 가운데 20세기 초 영국의 신자유주의, 즉 New Liberalism에 대한 논문을 쓴 극히 드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1993년 50쪽에 가까운 지면을 통해 그것에 대해 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New Liberalism과 복지국가, Neo-Liberalism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양자가 상반되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이 같아서 혼동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New Liberalism을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 모두 사회주의자? :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사회비평』, 제 9호, 1993. 이근식 교수도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제목의 소절에서 20세기 초 영국의 신자유주의를 개략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New Liberalism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복지국가의 이념으로 연결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는 뒤에 그것을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자유주의와 한국사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근식, 황경식 편, 삼성경제연구소, 2001) pp. 36-41. 그리고 김균 교수와 김병곤 교수 등이 New Liberalism 내지 사회적 자유주의를 짧게 언급했다. 김균,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p. 86. 김병곤, 「신자유주의 국가론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철학적 기원」, 『사회경제평론 :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제도전』, 한국사회경제학회, 제 13호, 1999년. p. 108.
- 7)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 그 비판적 연구』, (민음사, 1991), pp. 203-4, 박우룡, 「자유주의」, 『서양의 지적 운동 II』, (김영한, 임지현 편, 지식산업사, 1998), p. 77-8.

로운 자율적 시장체계의 조화로운 기능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기균형적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생산과잉이나 경기침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⁸⁾. 실제로 빅토리아 중엽 ‘세계의 공장’으로서 영국의 번영과 평화가 이러한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잘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사조는 이 시기에 절정에 달했고 그래서 이 시대는 ‘자유방임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19세기말이 되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 특히 자유방임주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국가간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들여다보자. 영국경제는 독점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대불황’(Great Depression 1873-1896)에 직면했다. 과잉생산은 기업도산을 낳았고 이는 대규모 실업과 빈곤이라는 사회문제로 귀결되었다. 더구나 독일과 미국 등의 급속한 산업화는 세계시장에서 영국 상품의 독주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다시 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그런 상황에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2차 선거법의 개정으로 이미 유권자로 되어 있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자유방임으로 발생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의 간섭을 요구하는 것’을 그 핵심 교의로 하는 New Liberalism이 대두하게 된 배경이다. 그리하여 ‘New Liberalism’이란 용어 자체가 처음으로 인쇄물에 등장했던 것은 1889년이였다.

---우리의 인민을 위해 신체적 안락을 보다 광범하게 확산시키고 민족적 도덕성의 표준을 보다 높히는 --- 개혁들을 고안해내는 책임이 정치가들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new Liberalism이다⁹⁾.

에설리 존즈는 인민의 물질 및 도덕생활을 향상하는 개혁의 책임이 그 자신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정치가, 다시 말해 국가에도 있음을 강조

8) 서정훈, 「홉슨의 제국주의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p. 19

9) L. A. Atherley-Jones, "The Liberalism," *The Nineteenth Century*, xxvi, 1889, p. 192. W. H. Greenleaf, *The British Political Tradition*, Vol. 2, p. 142에서 재인용.

하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자유주의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자유방임’을 대체하는 ‘간섭국가’의 개념을 가진 New Liberalism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New Liberalism의 교의는 일군의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절박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몰두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이들은 보다 평등하고 협동적 사회를 갈망하면서 자유당의 내부와 그 언저리에서 실업과 빈곤의 치유를 위한 국가의 경제적 개입정책과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가운데 특히 홉하우스와 홉슨이 New Liberalism의 교의를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⁰⁾. 홉하우스는 정치이론과 사회이론에서, 그리고 홉슨은 경제이론에서 New Liberalism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홉슨의 경제이론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Neo-Liberalism의 핵심교의가 경제문제에서 ‘국가간섭으로부터 자유방임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데 비해 홉슨은 ‘자유방임으로부터 국가간섭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정반대의 논리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홉슨이 국가간섭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의 ‘이단적’ 경제이론인 저소비론(under-consumption theory)은 국가간섭의 필요성을 도출해내는 고리가 되고 있다. 그의 저소비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화로운 분배’라는 고전경제학의 가정과는 달리 노동과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들 사이의 ‘경제적 교섭’에 힘이 개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희귀한 어떤 요소, 주로 자본이 힘에 의해 획득된 이익을 취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불로소득은 다

10) Michael Freedon, *The New Liberalism : An Ideology of Social Reform*,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9, p. 253, Peter Weiler, *The New Liberalism : Liberal Social Theory in Great Britain, 1889-1914*, (Garland Publishing Inc. 1982), p. 22. S. Collini, *Liberalism and Sociology : L. T. Hobhouse and Political Argument in England 1880-19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5. P. Clarke, *Liberals and Social Democra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 1, N. Wintrop, “Liberal Democratic Theory : The New Liberalism,” in *Liberal Democratic Theory and Its Critics*, (ed., N. Wintrop, Croom Helm, 1983), p. 86 등.

큰 요소의 소비력을 위축시킴으로써 저소비와 과잉자본을 야기한다. 이는 다시 과잉생산과 과도한 유희자본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는 주기적인 불황과 실업이다. 이러한 실업이 바로 만성적 빈곤과 직결되는 것이다¹¹⁾.

홉슨은 빈곤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잘못된 분배체계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의 대변자인 국가가 나서야 할 정당한 논거를 마련했다¹²⁾. 홉슨은 이제 국가 간섭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소비는 실업과 자본의 유희상태의 경제적 원인이다. 그러므로 악의 뿌리까지 미치는 유일한 치유책은 생산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소비의 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 이러한 치유책은 소비력의 증대에 영향을 주는 정책노선에 의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¹³⁾

그 정책은 노동자의 소비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개혁의 이름아래 독점과 불로재산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정책’이다. 홉슨은 바로 그러한 정책을 ‘New Liberalism’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해 표현하기도 했다¹⁴⁾.

- 11) 서정훈, 「홉슨의 신자유주의」, 『서양사론』, 제 47호, 1995년, pp. 9-10. 저소비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서정훈, 「홉슨의 제국주의론 연구」, pp. 18-36을 참조할 것. E. H. 카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이 자유방임의 자본주의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여 대규모 국가간섭을 촉발했던 최대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E. H. Carr, 『새로운 사회』, (박상규역, 서문당, 1972), p. 47. 카는 19세기말의 ‘대불황’ 및 그것에서 기인했던 국가간섭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홉슨이 저소비론을 수립한 직접적인 동기가 대불황으로 인한 대량 실업 및 만성적 빈곤이었다는 점에서 카의 말처럼 대공황보다 반세기 앞서의 대량실업이 간섭 국가의 원리를 처음 수립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 12) 이밖에도 홉슨이 국가간섭의 원리를 수립하는데 사용된 근거는 ‘사회유기체 이론’과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의 사회’라는 개념, 그리고 ‘확대된 자유’의 개념 등이 있다. 서정훈, 「홉슨의 신자유주의」를 참조할 것.
- 13) J. A. Hobson, *The Problems of the Unemployed, An Enquiry and An Economic Policy*, (Methen, 1896), p. 98.
- 14) J. A. Hobson, *The Crisis of Liberalism : New Issues of Democracy*, (P. S. King & Son, 1909), xi.

결국 흡슨의 New Liberalism은 자유방임으로부터 발생한 불황과 실업, 빈곤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간섭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흡슨과 흡하우스 등에 의해 체계화된 간섭국가의 원리는 1906년 집권한 자유당에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노동자 배상법과 노동쟁의법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장려법, 노인연금법, 어린이 보호법, 광부 8시간 노동법, 주택 및 도시 계획법, 최저 임금법, 직업 알선법, 국민 보험법, 노동조합법 등 일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련의 개혁입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정책에 필요한 재정은 누진세와 상속세 등 주로 부유층의 부담으로 충당되었다. 자유당의 이러한 사회정책은 ‘근대적인 복지국가로 향하는 최초의 이정표’였으며 ‘개인이 성실하고 근면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어느 정도는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빅토리아 시대의 원칙에 대한 거부’에 기초한 것이었다¹⁵⁾.

이제까지 우리는 New Liberalism이 고전적 자유주의에 비해 새로운 점이 자유방임으로부터 국가간섭으로의 전환임을 고찰해왔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에 대한 국가간섭을 정당화하는 흡슨과 흡하우스의 교의가 명백하게 ‘집단주의적’(collectivistic) 담론으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그것은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인 개인주의와 대립된다¹⁶⁾. 그렇다면 New Liberalism은 자유주의의 본질과 대립되며 결국 자유주의 아닌 사회주의 등 어떤 다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사실 그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수적인 진영의 일부는 New

15)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p. 255, 케네스 O. 모건 엮음, 『옥스퍼드 영국사』, (영국사학회 옮김, 한울, 1997), p. 589. 자유당의 이러한 사회개혁정책이 ‘복지국가로의 전환점’이나 ‘복지국가의 기원,’ ‘과거에서 이탈한 급진적 변화의 예고’라는 긍정적 시각과는 달리 그것이 ‘19세기의 개인주의적인 낡은 원칙인 억제효과적인 구빈법의 원칙’에서 해방되지 못했다고 보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임영상, 『자유당 정부의 사회입법』, 『사회복지국가의 형성』,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민음사, 1983). pp. 137-8, p. 170. 그러나 부정적 시각은 New Liberalism에 대한 연구자들에 의해 극복됨을 뒤에 고찰할 것이다.

16)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p. 27

Liberalism을 ‘무책임하고 무지한 또 다른 사회주의’로 규정해왔다¹⁷⁾. 이러한 지적은 간섭국가의 원리가 지닌 집단주의적 성격뿐만 아니라, New Liberalism의 대표적 이론가들인 홉슨과 홉하우스가 ‘자유주의 안에 들어 있는 사회주의’(Socialism in Liberalism)라던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Liberal Socialism)¹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이들이 진정한 자유주의와 진정한 사회주의를 절충, 종합하려 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일면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사회주의 혁명가 레닌은 홉슨의 신자유주의적 개혁론을 ‘순진무후한 뻔뻔 부르주아적 비판의 진수’라고 조롱했는데 이는 그가 New Liberalism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시사하며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 역시 그런 태도를 답습하고 있다¹⁹⁾. 즉 New Liberalism은 좌와 우라는 두 극단에서 자의적인 잣대로 재단되어 ‘구자유주의’ 내지 ‘사회주의’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구자유주의가 개인주의적,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이고 이에 비해 New Liberalism은 집단주의적, 국가간섭 지향적이다. 그러나 New Liberalism이 자유주의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의 국가간섭은 자유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홉슨과 홉하우스에 따르면 자유의 주된 적은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방입된 시장경제일 수 있으며, 민주화된 국가는 오히려 그러한 적들을 통제해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이리하여 국가는 자유의 적이 아닌 지원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17) Norman Wintrop, “Liberal Democratic Theory : The New Liberalism,” p.119.

18) 송규범, 「홉하우스의 신자유주의」, 『서양사론』, 41, 1993, p.124.

19)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in Lenin : Selected Works*, (Moscow, Progress Publisher, 1977), pp. 248-9. 프리덴은 사회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가 ‘한 세기 전에 이미 폐기했던 일련의 고전적 자유주의 원칙들’마저 여전히 그것의 오류인 것으로 비난할 정도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Michael Freedon, *The New Liberalism*, p.1.

20) P. Weiler, “The New Liberalism,” p. 184. 와일러는 그들이 자유주의 전통과 가장

국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동시에 전통적 자유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홉슨은 사람이 인격개발과 일을 위한 모든 물질적, 도덕적 수단을 획득할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따라서 국가가 나서 그러한 평등한 기회를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홉슨의 말을 들어보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장애의 제거를 위한 한정된 과업으로서의 자유주의의 소극적 개념은 철학적으로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오류이다. 한 당파로서 이 나라의 자유주의자들은 결코 그러한 편협한 자유방임적 개인주의의 이론이나 정책 모두를 신봉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자유를 양적으로 제한되고 성격상 완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²¹⁾

즉 자유주의의 교의에는 ‘계약의 부재’에 내재한 자유라는 소극적,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회의 현존’에 내재한 자유라는 적극적인 측면이, 달리 말해 ‘소극적 자유’의 개념과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모두 들어 있다는 것이다. 홉슨에게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야말로 계약으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기회균등 모두를 옹호하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정치경제학자들이 그것을 축소, 왜곡하여 ‘천박한 상인의 학문’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보였다.²²⁾ 그러므로 홉슨은 자신의 New Liberalism이 자유주의의 수정이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그러나 망각된 요소를 되찾아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홉슨은 자신이 한번도 자유주의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유주의의 전통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²³⁾

첨예하게 단절된 것은 국가활동에 대한 그들의 옹호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주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그들의 인식임을 지적했다.

21) *The Crisis of Liberalism*, p. 92

22) *The Social Problem*, (James Nisbet, 1901), pp. 21-5.

23) 홉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그의 견해와 느낌이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이끌리기는 했지만, 자신은 결코 사회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 페비안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고 뒷날 회고하였다. *Confessions of An Economic Heretic*, (George Allen & Unwin, 1938), p. 29

우리가 홉슨의 이러한 주장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적어도 New Liberalism이 기본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단절이라기보다 연속이라는 점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New Liberalism'이라는 용어는 '연속과 변화'를 모두 표현하는 매우 적절한 용어로 보인다. 즉 New Liberalism은 자유주의와 모종의 점에서 새롭게 달라졌다는 것, 즉 변화를 의미한다. 동시에 그것은 그럼에도 여전히 궁극적으로 자유주의에 속한다는 것, 즉 연속을 의미한다. 물론 역사는 변화를 추적하는 학문이므로 연속보다는 단절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New Liberalism이 구자유주의와 같거나 사회주의라는 사회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의 평가는 '연속' 또는 '변화'와 '단절'에 지나치게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New Liberalism은 자유주의에 속하는 것이로되 새로운 자유주의, 즉 개혁된 자유주의였다.

III. Neo-Liberalism : '개입주의에서 다시 자유방임으로'

Neo-Liberalism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된 자본주의 경제의 호황, 홉스봄의 말을 빌린다면 '황금시대'가 1970년대 중반 끝장나고 장기적인 불황에 돌입하면서 새롭게 세를 얻기 시작한 이데올로기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제한받지 않는 자유시장'을 그 중심교의로 내세웠다²⁴⁾. 이미 1930년대부터 개입주의적 케인즈 경제학을 비판하고 '자유주의의 부활'을 주장해 Neo-Liberalism의 원조로 인정받는 하이에크와 그의 제자 프리드만의 경제이론이 이때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²⁵⁾. 이처럼 Neo-Liberalism은 먼저 경제학 이론으로서 우세를

24) E. Hobsbawm, 『극단의 시대』, (이용우 역, 까치, 1997), p. 377. 561-563.

25) 1974년에 하이에크가 그리고 2년 뒤에는 프리드만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1969년에 처음 제정되었던 노벨 경제학상이 잇따라 Neo-Liberalism의 이론적 원조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해 관련연구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보인 뒤 곧바로 영미권의 경제정책을 지배하게 되었다. 1979년 영국의 ‘대처리즘’과 1980년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먼저 세계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²⁶). 그리하여 우리의 귀에도 익숙한 ‘긴축재정’과 ‘감세,’ ‘규제철폐 내지 완화,’ ‘작은 정부,’ ‘공기업을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등등의 Neo-Liberalism의 단골 메뉴들이 등장하였고 이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특히 ‘외채위기’라는 계기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배적인 조류가 되었다. 그리고 제 3세계에게는 그것들이다 ‘개방’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Neo-Liberalism은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한 하나의 인기없는 적은 분과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불황을 틈타 자신의 독단적인 교의와 사제, 입법기관 그리고 이단과 불신자를 수감하는 감옥을 가진 세계적 주요 종교가 되어 전세계 민중 위에서 군림하게 되었다²⁷).

Neo-Liberalism은 무엇에 비해 새로운가? 왜 Liberalism앞에 Neo라는 형용사가 붙었는가? 그 ‘새로운’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자들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문제를 푸는데 상당한 추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는 Neo-Liberalism이 무엇을 비판하면서 대두하였는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근식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신자유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정부의 역할을

해왔다. Susan George에 따르면 신자유주의가 중력과 같은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위적인 구성물인데도 신자유주의자들은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여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자연적이고도 정상적인 조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체계가 어떤 재앙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신의 행위처럼 필연적이고도 유일하게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질서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Susan George, “A Short History of Neo-Liberalism,” <http://www.zmag.org/CrisesCurEvts/Globalism/george.htm>

26)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pp. 103-116.

27) Susan George, “A Short History of Neo-Liberalism,” <http://www.zmag.org/CrisesCurEvts/Globalism/george.htm>

확대하였던 영, 미에서 정부 역할의 확대가 초래한 국가의 실패를 비판하여 국가 역할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확대를 주장하며 다시 부활한 다음, 전세계로 보급된 새로운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이 교수에 따르면 Neo-Liberalism은 복지국가의 실패를 비판하고 시장기능 확대를 주장하는, ‘부활한’ 새로운 자유주의이다²⁹⁾. 여기서 ‘부활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교수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자.

구미의 근, 현대사를 보면 크게 보아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전형적인 개입주의인 중상주의가, 그 이후 19세기에서 20세기의 대공황까지는 자유주의가, 그 다음 20세기의 70년대까지는 개입주의가, 그리고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다시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경제정책기조로 등장해왔다³⁰⁾.

19세기에서 1929년 대공황까지는 자유주의의 시대이다. 그리고 1980년 대 이후는 다시 자유주의의 시대이다. 그렇다면 1980년 이후의 자유주의는 19세기 그것의 ‘부활’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두 자유주의 사이에 낀 개입주의가 자유주의에 대립된 것, 달리 말해 자유주의가 아닌 어떤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부활은 바로 앞 시대에서 자유주의가 소멸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Neo-Liberalism에서 Neo의 뜻은 ‘부활한’ 혹은 ‘재생한’이라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국가개입주의에 대한 대립이므로 경제적 자유주의,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자유방임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유방임주의가 자유주의라는 명칭을 차지할 정도이므로 그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적 요소임을 의미하는 것

28) 이근식, 『자유주의와 한국사회』, p. 50.

29) 김균 교수도 Neo-Liberalism이 ‘자유주의의 부활’이란 의미로도 사용됨을 지적하였다. 『하이테크와 신자유주의』, p. 86

30) 이근식, 『자유주의와 한국사회』, p. 51. 장하준 교수도 2차 대전 직후 ‘자유방임주의’ 대신 ‘개입주의’가 득세했다며 이 교수처럼 개입주의란 용어를 사용했다.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정립을 위하여』,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제도전』, (한국사회경제학회, 풀빛, 1999), p. 55.

이기도 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결국 193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의 개입주의, 달리 말해 복지국가의 시대는 자유주의가 아닌 것이다³¹⁾. 이러한 견해는 바로 Neo-Liberalism의 원조인 하이에크의 그것과 일치한다. 하이에크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를 자유주의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개입주의를 ‘농노제에 이르는 길’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³²⁾. 그는 ‘자유시장 = 개인의 자유’라는 등식의 신봉자였고 그 개인의 자유는 자유주의의 본질이었으므로 그에겐 자유시장으로부터의 어떠한 이탈, 즉 어떠한 개입주의도 자유주의의 범주에 들 수 없는 것이었다. 하이에크에게는 복지국가의 시대에 소멸되었던 자유주의가 부활된 것으로 보였다. 즉 그의 Neo-Liberalism은 ‘부활된 자유주의’이며 19세기의 ‘구자유주의’에 비해 ‘신자유주의’이다. 그것은 19세기의 구자유주의와 동일한 내용을 가졌으며 다만 등장 시기에서만 다르다. Neo-Liberalism이 ‘신’ 자유주의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오직 등장시기가 ‘신’이라는 것임을 지적해둔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이념 내지 개입주의가 진정 자유주의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었을까?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E. H. Carr의 말은 복지국가의 성격 규정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세기의 자유방임적 ‘야경국가’가 논리적으로 그 반대의 것임과 동시에 논리적 귀결이기도 한 오늘날의 ‘복지국가’로 변화해간 계 단계를 추적하는 것보다 더 매혹적인 현대사의 테마는 없다³³⁾.

31) 이 교수는 개입주의에 대립되는 것으로 장하준 교수처럼 자유주의 아닌 자유방임주의란 용어를 사용하고 또 ‘자유주의의 부활’을 운위하지 않았다더라면 그의 복지국가 개념이 자유주의에서 배제되는 일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용했던 용어들은 그가 하이에크와 일치된 견해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32) 하이에크는 책 제목 자체를 ‘The Road To Serfdom’이라 했다. 한국어판 제목은 ‘노예의 길’이라고 번역되어있지만, 자유주의적인 근대 자본주의가 개입주의로 인해 중세의 농노제 시대로 퇴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농노제로의 길’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F. A. Hayek, 『노예의 길』, (김영청 역, 자유기업센터, 1999)

33) E. H. Carr, 『새로운 사회』, p. 38.

카에게 복지국가는 자유방임적 야경국가, 달리 표현하면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논리적 대립물이다. 그런데 복지국가가 동시에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실의 불평등한 경쟁을 방임했을 때 대공황과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며 그러한 사태는 결국 국가개입, 복지국가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홉스봄은 2차 대전이후의 자본주의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혁된 체제’였거나 ‘새로운 형태의 구체제’라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결합’이었다고 주장했다³⁴⁾. 그에 따르면 전후 30년 동안 서방의 사상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필요하다면 정부의 체계적인 통제와 혼합경제의 운영을 통해서 그리고 조직된 노동운동과 협동함으로써’ ‘완전고용과 공업화와 근대화의 세계를 이룩하자’는데 합의하고 있었다³⁵⁾. 카와 홉스봄은 ‘개혁 자본주의’ 내지 ‘혼합경제’를 ‘자유시장 자유주의’와 대립시켰을 뿐 그것들이 자유주의의 범주에 드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전체적 논의에서 복지국가의 이념이 사회민주주의 쪽에 다소 기울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즉 바로 복지국가의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이 그것과 자유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의 자체를 드물게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악담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이념, 즉 개입주의는 자유주의의 범주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 김병곤 교수는 ‘복지 자유주의’라는 용어로 ‘개입주의적 자유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즉 그는 국가의 역할을 통해 자유와 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복지 자유주의’의 이념이 고전적 자유주의, 달리 말하면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를 누르고 서구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했다³⁶⁾. 이 경우 복

34) E. Hobsbawm, 『극단의 시대』, pp. 376-7.

35) E. Hobsbawm, 『극단의 시대』, pp. 380-1. 장하준 교수도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종말’과 ‘수정 자본주의’ 내지 ‘혼합경제’의 대두, 그리고 다시금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회귀’를 유사하게 논하고 있다.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정립을 위하여』,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pp. 55-6.

36) 『신자유주의 국가론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철학적 기원』, p. 108.

지국가의 이념은 자유주의의 범주에 들어있는 것이다. 김세균 교수의 경우도 복지국가의 이념을 부분적으로 자유주의의 범주에 두고 있다. 즉 그는 케인즈주의적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의 계급타협이 ‘혁신적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던 미국의 경우와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된 서구의 경우를 나누고 있는데³⁷⁾,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미국에서 ‘혁신적 자유주의’가 복지국가의 강력한 이념임을 추론할 수 있다. 사실 복지국가나 개입주의는 궁극적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자본주의의 이념인 자유주의의 범주에 들어갈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에 지나치게 경도된 Neo-Liberalist들의 시각이 아니라면 복지국가에서 ‘복지 자유주의’ 내지 ‘개입주의적 자유주의,’ ‘혁신적 자유주의’의 존재를 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제 앞 장에서 자세하게 고찰하였던 New Liberalism과 복지국가와의 관계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 개입주의를 자유주의와 대립시켜 ‘개입주의적 자유주의’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처럼 보였던 이근식 교수도 세기의 전환기에 있었던 영국의 New Liberalism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를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칭하면서 이것이 ‘New Liberalism’으로도 지칭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³⁸⁾.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사회적 자유주의가 시장을 불신하고 ‘적극적 자유’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이 목표이고 국가가 수단이므로 결국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자유주의와 복지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념과 정책은 그 후에 영국 노동당과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그리고 미국의 수정자본주의에 의해 오늘날까지 그대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현대의 이러한 복지국가 이념으로서 아직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³⁹⁾.

37)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p. 66.

38) 이근식, 「자유주의와 한국사회」, pp. 36-41.

이 교수는 놀랍게도 사회적 자유주의, 즉 New Liberalism이 복지국가의 이념으로 살아있으며 시민주의 정당들에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살아있다고 말한다. 비록 그가 이러한 언급을 한 뒤 개입주의를 자유주의에 대한 대립으로 규정하여 이 모두를 다시 부정해버렸지만 말이다.

New Liberalism이 현대 복지국가 이념이라는 이 교수의 주장은 영국 역사가들의 이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치밀한 연구의 결과이다. New Liberalism은 이 교수의 말처럼 1920년대 이후 자유당의 몰락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급부상한 노동당과 그것의 사상적 기원인 페비안 사회주의가 계속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홉하우스와 홉슨은 상당 기간 동안 New Liberalism의 대표적인 이론가가 아니라 각각 사회학자와 제국주의 이론가로 명성을 얻었을 뿐이다. 복지국가의 전성기였던 195-60년대에 New Liberalism, 즉 개혁된 자유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복지국가를 사회민주주의에 연관시키는 것 이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New Liberalism 이전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이념을 연관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서 카가 말한 ‘복지국가는 자유방임적 야경국가의 논리적 대립이면서 그 논리적 귀결’이라는 그것의 이중적 의미는 바로 New Liberalism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⁴⁰).

39) 이교수는 토니 블레이 현 수상이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자유주의와 한국사회」, p. 40. 이 교수는 Neo-Liberalism에 대해 연구하면서 New Liberalism, 즉 사회적 자유주의의 존재를 꽤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한국의 몇 안되는 사회과학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유주의가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으로 존속한다는 점까지 생각했던 이 교수가 자유주의와 개입주의를 대립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이다. 그는 오늘날까지 사회적 자유주의의 존속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유당의 몰락과 함께 1920년대 그것은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났다’는 모순된 언급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정부개입에 반대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입장에 서면 사회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 포함되기 힘들 것이다”라고 했다가 “자유주의의 기본이 정치적 자유이므로 사회적 자유주의도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나라 사회과학도들의 New Liberalism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New Liberalism을 망각의 늪에서 구출해내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1971년에 출판된 크라크의 *Lancashire and the New Liberalism*이 New Liberalism에 대한 연구의 출발이었다⁴¹⁾. 그에 이어 곧 와일러와 에미, 프리던 등의 연구들이 줄을 이었고 이는 ‘신자유주의 연구붐’으로 연결되었다⁴²⁾. 바로 이들이 그 대표적인 이론가로 홉하우스와 홉슨을 발굴해냈고 이들의 사상에 집중적인 조명을 함으로써 New Liberalism의 교의를 체계적으로 정리, 종합했다. 홉슨이나 홉하우스가 더러 사용하는 정도였던 New Liberalism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적극적 자유를 위한 간섭국가의 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한 이데올로기의 명칭으로 만든 것도 바로 이들이었다. 이들은 침몰했던 ‘자유당호’와 New Liberalism의 관계를 절단하고 그것이 노동당의 복지정책들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New Liberalism이 복지국가의 주된 기원이라고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⁴³⁾.

-
- 40) 진정한 자유주의자였던 카가 New Liberalism의 존재를 알았다면, ‘복지국가는 자유방임의 논리적 대립물이면서 동시에 그 논리적 귀결’의 의미는 훨씬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즉 비록 개입주의는 자유방임의 논리적 대립이지만, 방임에 의해 손상된 개인의 자유는 국가개입을 통해 보존, 확대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무엇보다 개인 자유를 지키려했던 자유방임적 야경국가의 논리적 귀결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 41) P. F. Clarke, *Lancashire and the New Liberalism*, (Cambridge, 1971). Weiler는 자신의 저서를 구상하기 시작했을 때인 1966경에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역사가는 없었음을 회고하였고 Freeden도 같은 취지에서 역사가와 정치사상 연구자의 태만을 질책하였다. P. Weiler, *The New Liberalism*, preface, p. 1, M. Freeden, *The New Liberalism : An ideology of Social Reform*, p. 1.
- 42) P. Weiler, “The New Liberalism of L. T. Hobhouse,” *Victorian Studies*, vol. 16, no. 2, 1972, H. V. Emy, *Liberals, radicals and Social Politics 1892-19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M. Freeden, *The New Liberalism*. S. Colli, *Liberalism & Sociology* 등.
- 43) 영국 복지국가의 이론적 토대 형성에 대해 노동당 등 사회주의 세력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바로 이들의 연구에 의해 New Liberalism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프리던은 보수주의와 사회주의 등 경쟁이데올로기보다 New Liberalism이 복지국가 이념형성에서 우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즉 경쟁자들은 New Liberalism만큼 방대하고도 정교한 이론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M.

New Liberalism이 복지국가이념의 주된 기원이라고 할 때, 그것을 비판하고 대두한 Neo-Liberalism에서 'Neo' 즉, '새로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이에크에게는 변화는 '자유주의에 적대적인 개입주의로부터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로 이행'이었다. 이럴 경우 Neo-Liberalism은 자유주의의 부활 내지 재생이 되고, 그것은 시간적으로만 구자유주의와는 다른 신자유주의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비록 너무 단순한 논리지만 Neo-Liberalism이란 용어는 그런대로 논리적이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오류임을 살펴보았다. 진정한 변화는 '자유주의에 친화적인 개입주의, 달리 말해 개입주의적 자유주의로부터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로의 이행'이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Neo-Liberalism은 'New Liberalism으로부터 구자유주의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이 경우 'Neo', 즉 '새로운'은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설명해줄 수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Neo-Liberalism,' 즉 '신자유주의'는 그 내용에 맞지 않는 이름임이 분명하다.

IV. 맺음말

우리는 이제까지 19세기 중엽의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타난 New Liberalism, 그리고 대공황 이후 강화된 개입주의와 그것에 이어지는 복지국가의 이념, 마지막으로 1970년대 중반에 나타난 Neo-Liberalism이란 네 개의 이데올로기들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것들은, 특히 20세기 중엽의 개입주의와 복지국가의 이념은 Neo-Liberalist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유주의의 범주에 들어있는 것들이었다.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는 19세기 말 대불황을 계기로 New Liberalism으로 대체되었다. 즉 이 시기에 개입주의적 자유주의의 핵심교의가 체계화되었으며 그것은 영국에서 부분적으로 사회개혁 정책으로 현실화되기도 했다. 1929년의 대공황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개입주

Freeden, *The New Liberalism*. p. 1, p. 145.

의적 자유주의 교의를 국가로 하여금 적극 실천하게 만들었으며 그것은 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로 구체화되었다. 1970년대 중반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침체를 계기로 대두한 Neo-Liberalism은 결국 19세기 말에 부분적으로 시작되어 복지국가의 성립까지 계속 강화되어온 개입주의적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방임적 자유주의, 달리 말해 고전적 자유주의로 복귀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제 New Liberalism과 Neo-Liberalism이라는 두개의 신자유주의들 가운데 어떤 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신자유주의'란 명칭에 더 적합한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할 때이다. 이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이에크 등 Neo-Liberalist들은 개입주의를 자유주의와 적대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개입주의로부터 자유방임으로 전환을 자유주의의 부활로 보았다. 그래서 Neo-Liberalism은 19세기의 구자유주의보다 시기적으로 새롭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복지국가의 이념은 자유주의의 범주에 들어있었다. 따라서 Neo-Liberalism은 '개입주의적 자유주의로부터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로의 이행'이 된다. 그것은 결코 '자유주의의 부활'이 아니며 '구자유주의로의 복귀'일 뿐이다.

이에 비해 New Liberalism은 그 용어가 19세기 말에 이미 등장했으므로 일단 '신자유주의'라는 명칭에 대해 역사적으로 선택권을 갖는다. 그리고 New Liberalism은 자유방임으로부터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자유주의 교의의 중대한 개혁을 - 물론 자유주의의 범주 안에서 - 단행했다는 점에서 '개혁된 새로워진 자유주의'이다. 즉 그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New Liberalism이라는 용어는 변화(단절)와 연속 모두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New,' 즉 '새로운'의 의미는 자유방임주의로부터 간섭국가의 이념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Liberalism, 즉 자유주의의 의미는 그러한 변화가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의 범주 안에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간섭국가가 자유방임으로부터 발생한 개인자유 손상을 막고

이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이 개인의 자유가 아닌 개인의 명예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New Liberalism의 출발점인 것이고 그러한 점이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들인 고전적 자유주의나 Neo-Liberalism과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 New Liberalism이 '신자유주의'라는 명칭을 차지할 논리적, 역사적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Neo-Liberalism은 구자유주의로의 복귀'라는 이름이 그 내용에 적합하게 보인다. 이리하여 19세기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역사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로부터 개입주의적 신자유주의를 거쳐 다시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로 회귀에 이르고 있다.

그 교의에 적절한 명칭을 찾아주는 일은 Neo-Liberalist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억제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복지국가를 '농노제로 가는 길'이라고 매도하고 그 대안으로 자유주의의 부활, 즉 Neo-Liberalism를 설파했지만, 그것이 결국 옛날 불황과 실업사태를 야기했던 전력을 가진 '구자유주의로의 복귀'일 따름임을 보여주는 것은 Neo Liberalism의 시장지상주의 - 자유방임주의의 다른 이름인 - 의 허세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의 실패가 시장논리의 득세를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실패의 역사를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개입주의와 자유방임이라는 양극 사이에서 시대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중간지점을 찾는 일이 그 시대의 과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Neo-Liberalist들의 시장지상주의같은 극단적 이데올로기 공세가 먼저 차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김균,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임혁백 편, 나남출판, 1999)

- 김병곤, 「신자유주의 국가론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철학적 기원」, 『사회경제평론 :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13호, 한국사회경제학회, 1999년.
-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김세균, 김세균 등 지음, 문화과학사, 1998)
-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 그 비판적 연구』, (민음사, 1991)
- 박우룡, 「자유주의」, 『서양의 지적 운동 II』, (김영한, 임지현 편, 지식산업사, 1998)
- 서병훈, 「우리는 이제 모두 사회주의자? :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사회비평』, 제 9호, 1993.
- 서정훈, 「홉슨의 제국주의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서정훈, 「홉슨의 신자유주의」, 『서양사론』, 제 47호, 1995년
- 손호철,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임혁백 편, 나남출판, 1999)
- 송규범,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이념」, 『사회복지국가의 형성』,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민음사, 1983)
- 송규범, 「신자유주의」, 『서양의 지적 운동 I』, (김영한, 임지현 편, 지식산업사, 1994)
- 송규범, 「홉하우스의 신자유주의」, 『서양사론』, 41, 1993.
- 이근식, 「자유주의와 한국사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근식, 황경식 편, 삼성경제연구소, 2001)
- 임영상, 「자유당 정부의 사회입법」, 『사회복지국가의 형성』,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민음사, 1983)
- 장하준,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정립을 위하여」,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한국사회경제학회, 풀빛, 1999)
-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임혁백 편, 나남출판, 1999)
- E. H. Carr, 『새로운 사회』, (박상규역, 서문당, 1972)
- F. A. Hayek, 『노예의 길』, (김영청 역, 자유기업센터, 1999)
- E. Hobsbawm, 『극단의 시대』, (이용우 역, 까치, 1997)
- K. O. Morgan 엮음, 『옥스퍼드 영국사』, (영국사학회 옮김, 한울, 1997)
- L. A. Atherley-Jones, "The Liberalism," *The Nineteenth Century*, xxvi, 1889.
- P. F. Clarke, *Liberals and Social Democra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78)
- P. F. Clarke, *Lancashire and the New Liberalism*, (Cambridge, 1971)
- S. Collini, *Liberalism and Sociology : L. T. Hobhouse and Political Argument in England 1880-19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H. V. Emy, *Liberals, Radicals and Social Politics 1892-19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 Michael Freedon, *The New Liberalism : An Ideology of Social Reform*,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W. H. Greenleaf, *The British Political Tradition*, Vol. 2, (London, 1983)
- J. A. Hobson, *The Problems of the Unemployed, An Enquiry and An Economic Policy*, (Methen, 1896)
- J. A. Hobson, *The Crisis of Liberalism : New Issues of Democracy*, (P. S. King & Son, 1909)
- J. A. Hobson, *Confessions of An Economic Heretic*, (George Allen & Unwin, 1938),
- J. A. Hobson, *The Social Problem*, (James Nisbet, 1901)
-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in Lenin : Selected Works*,(Moscow, Progress Publisher, 1977)
- Peter Weiler, *The New Liberalism : Liberal Social Theory in Great Britain, 1889-1914*, (Garland Publishing Inc. 1982),
- P. Weiler, "The New Liberalism of L. T. Hobhouse," *Victorian Studies*, vol. 16, no. 2, 1972
- N. Wintrop, "Liberal Democratic Theory : The New Liberalism," in *Liberal Democratic Theory and Its Critics*,(ed., N. Wintrop, Croom Helm, 1983)
- Susan George, "A Short History of Neo-Liberalism," <http://www.zmag.org/CrisesCurEvts/Globalism/george.htm>

《ABSTRACT》

There are two 'new Liberalisms,' 'Neo-Liberalism' and 'New Liberalism' translated into a Korean Language, 'Shinjayoujuyi'. This paper aims to show the difference of Neo-Liberalism from New Liberalism and to give each of them proper name logically and historically.

New Liberalism is an ideology whose main doctrine laid emphasis on the need of 'state intervention' in order to solve 'the social problem' caused by 'laissez-faire.' It substituted for 'Classical Liberalism' in the late 19th century in Great Britain. It was not a sort of socialism but 'reformed' liberalism. The Great Depression in 1929 forced governments to practice the interventionist liberal doctrine established about 30 years before. It was shaped up as 'welfare state' throughout the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after world war II.

The main tenet of Neo-Liberalism is "an unregulated market is the best way to increase economic growth, which will ultimately benefit everyone." In other words, Neo-Liberalists emphasized laissez-faire as the most efficient means to solve the crisis of capitalist world economy due to Interventionism and welfare state.

They thought it is the 'revival of economic liberalism' retired by Interventionism. Namely, for them Neo-Liberalism is revived Liberalism. The men who accepted 'Neo-Liberalism' as a term in fact agreed to such a view. In this case they, intentionally or not, appear to have to exclude Interventionism or the idea of welfare state from the category of Liberalism. We found that it was Interventionist Liberalism. I conclude that New Liberalism is truly 'new' liberalism

and Neo-Liberalism had better be renamed as ‘the return to Old Liberalism’ not ‘the revival of Liberalism.’